

**Economic Policy Reforms  
Going for Growth - 2006 Edition**

Summary in Korean

경제정책 개혁  
**2006 년도 성장추진 보고서**  
국어 개요

개요

지난 20 년 간 일본과 일부 유럽국을 비롯한 다수 OECD 국의 생활수준은 최고 수준을 보인 국가에 비해 더 뒤떨어진 반면 일부 국가의 잠재 성장은 향상되었다. 이와 같은 국간의 성과 괴리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생활수준의 지속적 향상세를 촉진시키는지에 관한 정책적 교훈을 준다.

지난해 최초 발간한 ‘성장 추진’보고서에 이러한 정책 교훈을 일부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도입한 신규 벤치마킹 감독 제도는 오래된 OECD 의 국별·부문별 조사 방식을 보완하고 있다. 경제성과와의 연관성 구축이 분명한 구조정책 지표와 OECD 위원회 및 직원의 심층 전문지식을 나란히 감안하여 OECD 회원국별로 5 대 정책 권고사항을 도출한다.

지난해의 성장추진보고서에서는 주로 노동시장 및 상품시장에 초점을 두었던 반면 동 보고서에서는 이 부문에서 이루어진 진전상황을 조사한다. 아울러 구조 감독 작업의 기초가 되는 지표 범위를 확대하여 오랫동안 주요 성장 동인으로 인식돼 온 혁신 촉진에 유효한 정책을 반영하려 한다. 같은 맥락에서 이 부문의 활동 규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시험적으로나마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감독 과정상의 성공 측정에 쓰이는 기준 사항을 검토해 본다.

1 장에서는 2005 년 보고서의 정책 수립 우선순위에 따른 정책방안 도입에 있어 지난해 각국이 어느 정도 진전을 보였는지 요약한다. 노동생산성 성과와 노동가동률 제고를 목적으로 수립된 정책 개혁의 진척 정도는 아래 요약된 핵심 결론에 비추어 검토한다:

- 노동생산성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우선순위 차원에서, 제시된 최우선 정책과제에 일치한 움직임은 현재 개시되고 있거나, 이미 상품시장 진입의 통제

완화, 경쟁 제약적인 규제 완화, 인적자본 형성 강화,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정책부문 개혁 등의 노력으로 가시화되었다.

- 노동가동률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 우선순위 맥락에서, 제시된 최우선 정책과제에 따른 개혁조치는 유럽을 위시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시되지도, 계획되지도 않은 상태였다. 예를 들어, 일정 연령 초과 시 여전히 높은 목시적 근로세나, 세금 항목, 최저고용비 등의 축소 움직임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장애·질병 사회급여제도 부문에서나 개혁 움직임이 활발한 경향이다.

이 요약사항의 기초가 된 각 OECD 국(유럽연합도 하나로 포함)의 문서는 각국이 5 대 최우선 사안에서 이룬 진전을 보다 상세히 알려준다(2 장 참고). 실제로 일국 문서는 개혁 시행을 위한 결정사항 및 법률 통과 절차에 관한 정보와 함께 정부 발표안, 국회 제출된 법률안 등의 개혁 초기 단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3 장에서는 혁신 노력, 혁신 결과, 그리고 이 양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부문에서의 각국 특징을 국간 비교한다. 혁신은 오랫동안 물질 측면의 생활수준 향상에 핵심적 원천이 되어 왔지만 혁신 노력에 따른 결과는 크게 불확실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이익이 민간 기업 차원의 이익을 넘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혁신을 장려하고자 민간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제공, 공공기관의 연구 기금 지원 등의 다양한 방안을 개발, 도입하였다. 이와 더불어 특허법 및 법적 집행력 있는 법률 방안 이행으로 혁신 창출자는 혁신 사용에 관한 독점권을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게 되었다.

최근 몇 해 간 정책 수립상의 큰 관심사항은 앞서 언급한 방안과 여타 각종 방안의 효과성 제고로 혁신 체제의 효율성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공공연구기관과 산업계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 실시와 더불어 연구개발에 대한 재원조달방식의 세련화가 이루어졌다.

3 장에서 알아본 혁신의 주요 동인을 분석하여 혁신 촉진에 효과 있는 정책 권고를 국가별로 제시한다. 모든 OECD 국의 권고사항은 4 장에 게재된 개별 국가 문서에 명시화한다. 이때 노동시장 및 상품시장 경우와 동일한 접근법을 채택하는 바, 혁신 성과 미달과 결부된 정책들의 취약성이나 혁신의 결정요소(예로 기술, 금융 여건)에 반영된 취약성을 지적하여 선진 관행을 따라가는 방향으로 개혁을 실시해야 함을 알려준다.

혁신 결과와 제시된 정책 권고사항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국가집단이 형성된다:

- 북구, 미국, 일본은 선두 혁신 국가에 속하는데, 대부분이 지난 10 년 동안 고성장의 생산성을 기록했다(일본은 예외). 또한 대개 경우에 높은 고등교육 수료율을 보인다. 하지만 몇 국가는 서비스 부문의 혁신 촉진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 최하 수준의 혁신 성과를 보인 국가 중에 남유럽은 교육 제고에, 중유럽은 상품시장 경쟁 강화에 주력해야 하는 입장이다.
- 미국을 뺀 영어권 국가는 중간 수준에 속하는데, 생산성 성과는 대체로 양호했다. 공공 연구개발과 산업계 간의 협력 강화가 공통 과제로 남아 있다.
- 프랑스, 독일 등의 나머지 국가는 평균 이상의 혁신 성과를 보이는 경향이 있지만 고등교육 부문은 강화해야 한다. 대개 경우, 민간 부문의 연구개발 지원 목적으로 도입시킨 금융 방안을 보다 비용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5 장에서는 금융시장 규제와 경제성장 간의 연관성을 밝힌다. 금융 체제는 총 규모나 구조, 또는 은행 부문과 증시 내의 지배적인 경쟁 압력세에 있어 OECD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 차이는 규제 조치상의 국간 차이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셈이다. 특히, 은행 경쟁 장벽을 과도로 높게 유지하고 증시 투자가의 보호를 거의 보장하지 않는 규제적 틀은 금융 체제 발전에 장애가 되어, 결국 경제성장의 둔화 결과를 가져온다. 실제로 5 장의 실증적 분석에 따르면, 일국의 규제 틀이 금융 여건 발전에 유리한 조건일수록 외부 차입에 크게 의존하는 부문이 더 고속도로 성장함을 알 수 있다.

6 장에서는 어느 범위에서 1인당 GDP가 총 후생 수준을 적절히 반영하는 대리 요소로 활용되는지 평가한다. 물론 각종의 국민 계정 측정 부문 가운데 이 용도에 더 적합한 부문이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정보 입수가 수월치 않고, 결과적으로는 대부분의 OECD 국에서 GDP와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요컨대 여가 시간, 가계 간 소득 분배, 분배적 문제 등을 고려한 '확대' GDP 계산을 볼 때, 이 지표를 활용하거나 1인당 GDP를 활용하거나 국가 등급이 대체로 유사한 순위로 유지됨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1인당 GDP는 후생 평가 작업에 결정적 요소이지만 후생의 포괄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타 부문 측정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 OECD 2006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OECD 저작권 및 원본 출판물의 표제를 언급할 경우  
본 개요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다국어 개요는 영어와 불어로 각각 발간되었던 OECD 원본 출판물의  
발췌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OECD 출판물과 개요는 OECD Online Bookshop**  
[www.oecd.org/bookshop](http://www.oecd.org/bookshop)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ights@oecd.org](mailto:rights@oecd.org)

Fax: +33 (0)1 45 24 13 91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AC)  
2 rue André-Pascal  
75116 Paris  
France

본 기구 웹사이트 [www.oecd.org/rights/](http://www.oecd.org/rights/)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